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1
----------	-----

2020. 7. 16.(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심기보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6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7월 16일

-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및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중복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하고,
-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를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의 활동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요건·설치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충북도 「'20.1분기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보고(6.8)」에 따르면, 소속 각종 위원회는 156개*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105개(67%),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51개(33%)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해마다 위원회는 증가추세**에 있음.

* 성격별 : 심의 123개(79%), 자문 30개(19%), 복합(3%)

** ('17년)124개 → ('18년)134개 → ('19년)149개 → ('20년 1분기)156개

- 총 위원수는 3,004명(당연직 632, 위촉직 2,372명)이며 위촉직 여성위원비율*은 39.0%,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 위원은 136명으로 조사됨.

* 여성 위촉위원 총 수 / 위촉위원 수

- 위원회 개최 실적은 128회('20.1분기)이며 대면회의 65회, 서면회의 69회 임

○ 현재 충북도에는 위원회 설치의 기본 원칙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어 위원회 운영, 위원 제척·기피, 위원 해촉 등 설치·운영기준을 각 조례별로 규정하고 있음.

○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설치·운영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매년 증가하는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여성참여비율 저조 등 현행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임.

○ 이에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운영, 위원 제척·기피, 해촉 등에 대한 통합기준과 운영평가와 자체정비계획을 통하여 위원회를 통합·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유사·중복위원회 구성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조례 운영현황 》

연번	시·도	조례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1. 9.29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 7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06. 4.10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1999. 3. 2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2.29
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2012. 7. 2
7	경기도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 5.11
8	강원도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07. 5. 4
9	충청남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 2.20
10	전라북도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 5. 1
11	전라남도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013. 6.13
12	경상북도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8.11. 1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 7.18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 “담당부서”, “총괄부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위원회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함.
 -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정책기획관)을 지정함.
- 안 제3조는 위원회가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 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또한,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 확보와 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위원회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 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 위원회 설치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유사·중복 위원회 구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설치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토록 함.
 -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을 통하여 신설 위원회의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함.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함.
 -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맞는 위원 위촉을 위해 사전 위원후보자 인적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 안 제11조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하며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서면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록 등은 도의회나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토록 규정함.
-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공개 원칙과 회의 토론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회의 전 공지해야 할 것임.
-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6조는 도지사는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및 폐지, 통·폐합 등 정비, 존속기간 연장, 운영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또,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통합·폐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설립목적 달성하거나, 기능 상실 및 설치근거 소멸된 경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존속기한이 경과한 위원회는 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집행부의 위원회 운영평가 및 자체정비계획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통합·폐지에 대한 근거 마련은 위원회 효율적 운영에 매우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 안 제18조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위원회 정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개시일 7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현재, 충청도에는 156개 위원회가 운영되며 현행 위원회의 개선사항이 돌출되고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통합된 규정과 위원회 정비 근거 마련이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기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1
----------	-----

발의연월일 : 2020년 6월 29일

발 의 자 : 심기보, 박상돈, 최경천,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이수완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하고,
-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중복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를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의 활동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57호
- 협의 : 기획관리실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를 도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도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6.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한 사항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및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도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통합·폐지) 도지사는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보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위원회 정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개시일 7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존속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치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